

‘멜라민 사태’ 뒷북 행정 ... 근본 대책 없나

“中 식품 수입·유통 체계 전면 뜯어 고쳐야”

수입 식품 선별 방식 탈피 전수 검사해야
식품 관리 담당 부처만 7곳 ... 일원화 절실

중국산 유제품의 멜라민 함유 파문을 비롯해 기생충알 검지와 말라카이트 장어, 납꽃계, 생쥐머리 새우강에 이르기까지 중국산 식품이 식탁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중국산 식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땀질식 처방’을 남발하고 있는 데다 그나마 내놓은 대책도 실효성 있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이번에는 말로 수입·유통체계 전체를 개선하는 등 근본대책 수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구멍뚫린 식탁안전=식약청은 지난 24일 멜라민 함유 제품의 유통·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뒤 단속지침 등을 마련하지 못해 이들이 지난 26일에야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 때문에 멜라민이 검출된 ‘미사랑 카스타드’, ‘미사랑 코코넛’, ‘밀크러스크’, ‘베지터블 크리머F25’ 등 제품이 광주·전남 지역 소비자들에게 상당수 판매되는 등 식품안전망에 구멍이 뚫렸다. 이같은 문제는 정부가 실행프로그램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위한 정책’을 남발하기 때문이

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은 지난 28일 위해식품 근절대책의 하나로 식품안전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위해식품 제조자에 대한 무한책임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이는 을초 ‘쥐머리 새우강’ 사태 때도 나왔던 대책 가운데 하나다. 문제는 정부가 납꽃계, 기생충알 검지, 말라카이트 장어 등 식품 파문 때마다 이같은 ‘구호성’ 대책을 되풀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체계성 없는 식품관리=멜라민 사태의 원인으로는 정부의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 부재가 꼽힌다. 현재 식품안전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만 무려 7개에 달할 정도로 체계적인 식품안전 관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 8일 중국에서 멜라민 함유 분유를 먹은 영·유아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식약청은 “중국산 분유를 수입하지 않고 있다”라고만 발표했다. 유가공 제품은 농식품부 업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약청이 소관 업무가 아닌

점을 들어 유제품 관련 문제를 외면하고 농식품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이에 중국에서 OEM(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으로 만들어진 과정에서 멜라민이 검출됐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대책은 없나=전문가들은 외국 제품 및 원료의 수입·검역 뿐 아니라 원산지 표기방식 등을 포함한 수입·유통 시스템 전체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검역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입식품에 대한 선별 검사 방식에서 벗어나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과업체가 주문자생산방식(OEM)으로 생산, 국내에 들어오는 제 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검역, 식품위생 관리체계 일원화도 요구된다. 권순석 화순전남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식중독은 식약청, 전염병은 질병관리본부가 관리를 맡고 있지만 검사결과 전까지는 관리체계를 통합해 일사불란하게 감시 활동을 펼쳐야 한다”며 “이번 멜라민 사태를 계기로 정치·경제·사회분야에 밀려있던 국민의 건강권에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공중보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인한주기자 ahj@kwangju.co.kr



최근 중국산 멜라민 식품 파문과 관련, 민주당의 ‘멜라민 식품 퇴출대책 특위’ 의원들이 29일 인천 남구에 있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방문해 멜라민 함유 의혹 식품의 검사 과정을 점검했다. /연합뉴스

민간 식품 검사기관 35% 영터리 판정

민주당 최영희 의원 공개

식품의 위해성 여부를 판정하는 민간 식품위생 검사기관이 검사성적 허위발급 등 ‘영터리 검사’를 하다 보건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여당은 멜라민 파동이 확산되자 식품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일선 검사기관에 만연해 있는 업무태만을 바로잡지 않는 한 이 같은 대책은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입수해 29일 공개한 유통상반기 식품위생 검사기관 지도·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총 29곳의 검사기관 가운데 35%를 차지하는 10개 기관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청 단독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식약청은 민간 검사센터를 지정 검사소로 선정하고 식품업체는 이를 검사소에 식품 성분분석 및 위해물질 검사를 의뢰, 유통 적합 여부를 판정받고 있다.

서울 송파구 A연구소는 실험을 하지도 않고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의뢰받은 시료가 아닌 이미 실험이 완료된 자료를 인용해 성적서를 발급해준다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B연구소는 합성보존료 검사 시료를 분실하자 다른 시료를 검사한 뒤 이를 근거로 시험 성적표를 발급했다. 시료를 혼합하거나 임의로 전처리한 뒤 미생물 및 합성보존료 검사를 실시한 적도 있었다. /연합뉴스

학교 주변 등 800여곳 감시원 투입
광주·전남 멜라민 제품 수거 총력전

광주와 전남도가 멜라민이 함유된 과자와 유제품 등을 수거하고 유통과 판매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자치단체마다 특별감시반을 구성해 자체 수거율이 높은 대형마트 보다는 학교 주변 문구점이나 슈퍼마켓 등 소형판매업소를 위주로 관련 제품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역 내 대형판매업소 41곳과 초등학교 주변 251곳 등 470곳의 지도점검 대상 업소에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200명을 투입,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해당 식품 수거에 나섰다.

지금까지 해태제과 미사랑카스타드 1.62kg을 압류해 폐기했으며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제품 37.37kg에 대해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봉인조치 했다. 또 도브모카아몬드와 땅콩스니커즈, 카스타드치즈요거트

등 3가지 제품도 수거해 검사를 의뢰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중국산 유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광주시내 D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경로와 유통량, 제품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남도도 멜라민이 검출된 식품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해 폐기하도록 일선 시·군에 지시하고, 해태제과 미사랑카스타드를 비롯 멜라민 함유 검사가 진행 중인 89개 제품 382kg에 대해서는 유통되지 않도록 봉인조치했다. 또 지역 내 점검대상 업소인 식품판매업소 106곳과 슈퍼마켓 180곳, 학교주변 업체 58곳 등 총 344곳에 소비자식품감시원 131명을 비롯한 22개 민·관 합동점검반을 파견해 중국산 분유와 우유 함유제품 수거활동을 벌이고 있다. /총행기·윤영기기자 redplane@

‘멜라민 파동’ 국감 핫 이슈로

野 “정부 무사안일서 비롯” ... 국민 사과 요구
與 “제2쇠고기 파동 번질라” 조기 차단 주력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중국발(發) 멜라민 사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사태가 올 상반기 극심한 홍역을 치렀던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먹거리’라는 민감성이 가미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사태가 정부 여당의 무사안일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치 쟁점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자칫 ‘제2의 쇠고기 파동’으로까지 번지지 않도록 조기 차단에 주력하는 모양새

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가 쇠고기 파동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도 공공관계도 국감을 앞두고 터져 쟁점화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쇠고기 파동이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감정에 의해 증폭된 측면이 적지 않았고 결국 18대 국회 초반 내내 소수 야당에 끌려다니는 등 내용

을 겪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실에 기반한 사태 조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28일에 이어 29일도 당정협의를 한 동시에 윤여석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최고위원회의에 불러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당내 식품안전특위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인 것도 이런 부담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은 이번 당정 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게 철두철미한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희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멜라민 공포에 휩싸인 충격을 빨리 풀어드리려는 게 정치권의 당면 문제”라며 “일회성 대책으로 끝난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국민 먹거리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세우려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연일 ‘멜라민 대책회의’를 여는 등 대정부 및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죄면서 국감에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따질 기세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에 파문의 책임 소재를 추궁하는 등 이번 기회를 국감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여공세의 호재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7월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두 달 만에 중대 사태가 발생한 데다 작년 주중 한국 대사관에서 ‘사건경고음’을 울렸음에도 이를 무시한 정부에 대한 대국민 사과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